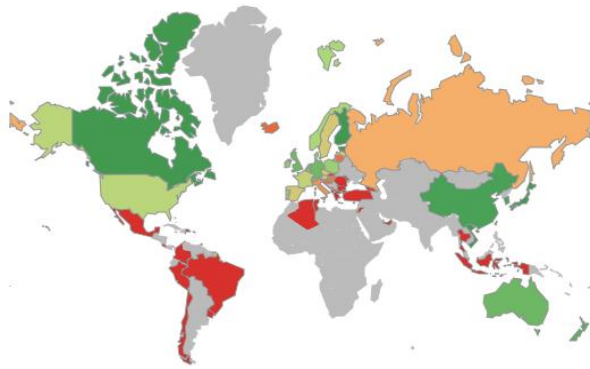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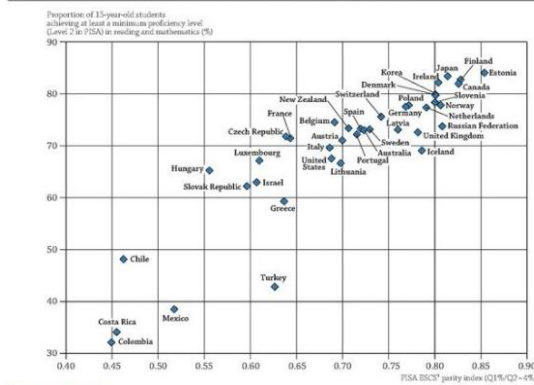


교육의 불평등 속 세계시민교육

Figure 2. Excellence and equity: Student achievement in PISA 2015 and the socio-economic parity index



교육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다. 가난, 질병, 불평등, 사회가 마주한 모든 문제는 교육을 향해 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경제·사회·문화 지위지수(ESCS)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최소 성취 기준을 달성한 학생의 비율이 비례한다. 또한 OECD 회원국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역시 지역 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북아메리카와 유럽, 동아시아 국가들이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반면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학업성취도가 낮다. 즉, 각국의 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은 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쳐 교육의 지역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교육의 지역 불평등 현상은 세계시민교육에서도 나타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4.7 번은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 등 교육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을 위해서는 ‘또 다른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초교육조차 쉽게 받을 수 없는 국가에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오만이다. 교육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세계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과 제도가 천차만별이기도 하다. 특히,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모두 높은 순위를 기록한 캐나다, 핀란드,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현황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캐나다는 과학, 수학, 읽기에서 OECD 회원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교육에서의 성평등, 사회적 배경, 이민자의 교육까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캐나다의 교육정책은 평등한 기회의 장을 강조한다. 정부는 각 학교의 이사회가 주축이 되어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 때 학교의 역할만큼 부모와 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 또한, 캐나다는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교육자에 대한 교육과 양질의 교육환경, 그리고 기관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단 하나의 행위자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질과 학생의 만족도는 높을 수 밖에 없다.

핀란드는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PISA 순위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공들인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강국으로 성장했다. 핀란드는 양질의, 평등한, 효율적이며 국제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여 국제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이다. 핀란드에서 유일한 시험은 고등 교육기관 입학시험뿐이며, 교육자들은 시험이 아닌 형식의 평가를 통해 커리큘럼을 얼마나 소화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1990년대부터 교육부는 교육기관에 권력을 위임했으며, 각 교육기관은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학생들은 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배움에 초점을 두어 직접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높은 만족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과학과 수학, 읽기 영역에서 OECD 회원국보다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학생의 사회적 배경이 OECD 회원국보다 높은 반면 평등 부문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취도가 OECD 회원국과 비슷했다. 높은 학업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식 교과목에서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내용과 방식은 사실 전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교육 과정 상, 한국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대부분 교외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기회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 과정 속 교과목 외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초·중·고 국가 교육과정에서 교과 시간 배당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의 약 10 배 정도라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행정같은 거시적 측면과 교실 내에서의 교육같은 미시적 측면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캐나다와 핀란드 정부가 각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교육기관 역시 실정에 맞는 커리큘럼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은 아이들이 교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비율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교육 체험 활동의 주체를 NGO, 정부, 대학생 등으로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체험을 늘려야 한다. 또한, 교실 내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 인권, 평화와 같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세계에는 다양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불평등을 해결할 열쇠를 우리는 이미 손에 꼭 쥐고 있다. 교육은 침략과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 미래라는 씨앗을 심었다. 수 없이 많은 날들이 흐른 지금 그 씨앗은 풍성한 숲을 이루고 끊이지 않는 열매를 키워낸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생각해볼 기회도 없이 자라나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반쯤 떠밀려 세계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아직도 세계에는 폭력, 전쟁, 빈곤, 불평등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세계시민교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다. 결국 우리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아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